



## 담배값 인상은 피할 수 없다!

### 금연,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동시에

보건복지부가 2005년 8월 25일 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354원에서 558원으로 204원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006년 상반기 국회 계류중이다. 담배가격을 인상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확보된 재원으로 흡연자 건강보호를 위한 금연사업, 암 검진 치료 관리, 공공보건의료 기반의 확충 등을 계획한 정부로서는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다. 담배값 인상의 효과성, 저소득층 및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배값 인상이란 가격정책과 동시에 금연구역 확대, 금연클리닉 등 흡연자 치료, 대상별 세분화된 금연홍보 강화 등 비가격정책도 강화하고 있어 금연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목적과 성과를 위해서도 담배 가격 인상은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담배가격 인상은 세계적 추세

담배가격 인상의 효과는 분명하다.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추적 관찰하여 흡연 여부를 조사하는 패널조사(panel)에서 2004년 12월 담배값 인상전 1,000명(흡연자 700, 비흡연자 300)의 패널을 구성하여 1월, 3월, 6월 조사결과 금연율이(8.3%→9.7%→11.0%) 계속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으며, 그 후 가격 인상 시점을 계기로 전국민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에서는 전체 흡연을 및 성인 남성 흡연율이 각각 4.0%, 7.5% 포인트 감소하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 역시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감소하는 경제법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정도만 우리나라보다 흡연율이 높으며 그 외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흡연율을 보이고 있다. 흡연과 관련하여 국내 연간 4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10조원 이상의 경제 사회적인 비용이 유발된다. 또한 흡연은 근래 우리나라처럼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통하여 충분히 예방 가능한 위험요인이 선진국 여러 나라의 담배규제정책을 통하여 입증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절대가격으로 20~30% 수준, 상대가격으로 50~70% 수준으로 여전히 낮아서, 높은 흡연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에서 담배가격을 급속하게 인상하고 있다. 1999년에서 2002년 EU 15개국의 평균

담배가격은 18.6% 인상되었다.

## 금연, 결국 저소득층의 소득역진성 개선

담배가격 인상 반대의 주 논지 중 하나로 저소득층 부담 가중문제를 꼽는다. 담배의 구매비용만 고려하면 담배값 인상이 소득역진적인 것처럼 보이나, 저소득층 흡연은 더 높은 기회비용을 유발하여 그 자체가 소득 역진적이고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흡연으로 건강에 더 많은 손상을 입게 되며, 더 많은 의료비를 지불하고 이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떨어져 소득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흡연을 중단한 저소득층은 담배구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건강이 개선되어 의료비 감소, 소득증가 등으로 소득역진성이 개선될 것이다.

담배가격 인상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논리가 있는데 흡연으로 인해 연간 4만 여명의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리고 연간 10조원 이상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담배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은 상식적으로 옳은가. 무엇보다도 담배라는 상품을 경제성장의 잣대로 분석하는 것 자체가 윤리적 모순이다.

담배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사회 일부에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여러 주체들이 복잡하게 얽혀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뿐인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담배를 이 사회에서 추방하는 방법으로서 담배가격 인상은 담배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임에 틀림없다. **대한결핵협회** †